

# '10년 신재생에너지 산업규모는 매출액 8.1조원, 수출액 46억불, 투자액 4조원, 고용인원 12천여명에 이를 전망

## -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150여개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

문의 |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02-2110-5402)

- 과거 5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제조업 기준)은 기업체수는 3.6배, 고용인원 13.3배, 매출액 29배, 수출액 31.4배로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2년간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민간투자금액도 3.1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10년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망도, 고용인원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1,715명, 매출액은 전년대비 100% 증가한 8조 699억원, 수출액은 전년대비 125% 증가한 46억불, 민간투자금액도 전년대비 27% 증가한 3조 9,270억원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식경제부가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파악을 위해 전문조사기관인 (주)디스플레이뱅크를 통해,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6개 신재생에너지원 150여개 기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음.
-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빠른 성장 중에서도, 특히 태양광, 풍력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져서, 향후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명확히 엿볼수 있었음
- 태양광산업의 경우, 고용인원은 '04년 170명에서 '09년 5,587명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으며, '10년은 7,572명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음
  - 그리고, 태양광산업 매출액도 '04년 332억원에서 '09년 2조 3,765억원으로 무려 72배 증가하였으며, '10년은 전년대비 126% 증가한 5조 3,736억원으로 전망되었음
  - 태양광산업 수출액은 '04년 6백만불에서 '09년 13억 8백만불로 218배 증가하였고, '10년은 전년대비 158% 증가한 33.8억불로 전망되었음
- 풍력산업의 경우, 고용인원은 '04년 281명에서 '09년 2,301명으로 약 8.2배 증가하였으며, '10년은 2,668명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풍력산업 매출액도 '04년 1,010억원에서 '09년 1조 340억원으로 10.2배 증가하였으며, '10년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조 8,210억원으로 전망되었음
  - 풍력산업 수출액도 '04년 58백만불에서 '09년 7억 24백만불로 12.5배 증가하였으며, '10년은 전년대비 76% 증가한 12억 73백만불로 전망되었음

- 한편 그동안 신재생에너지분야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도 '03년 1,180억원에서 '10년 8,084억원으로 6.6배로 증가 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금액도 '03년 370억원에서 '10년 2,528억원으로 6.8배로 크게 증가 하였음

〈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예산액 추이 〉

(단위 : 억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합 계	1,180	1,771	2,881	3,849	4,226	7,844	7,741	8,084
R&D	370	730	941	1,245	1,326	2,088	2,194	2,528
보급(보조, 융자)	754	989	1,862	2,493	2,630	4,490	3,154	2,920
발전차액	57	51	78	111	270	1,267	2,392	2,636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가스, 전기 안전 개선사업 추진

- 지난해 총 3천 382개소에 대해 12억원 지원, 올해는 13억원 지원 예정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기획부(02-6913-2134)

- 한국에너지재단은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의 특별기금 25억원을 지원받아 지난 '09년도부터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 안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가스/전기 안전 개선사업」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미인가 시설, 장애인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수용시설 등)의 가스·전기안전 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위험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각각 맡고 있으며,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이 시설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 개선공사를 해주고 있다.
- '09년의 경우 전국 8만8천200개소(가스 4만6천501개소, 전기 4만1천698개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스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3,371개 시설과, 전기안전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5개가 시설개선 대상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시설 자체적으로 개선한 경우와 기관을 이전한 경우를 제외한 3,382개에 대해 총 12억원을 들여 안전개선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13억원으로 약 3만2천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저소비 · 고효율제품으로 새 단장

##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143억원 지원 -

문의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02-2110-3948)

- 지식경제부(최경환 장관)는 올해 143억원을 투입하여 8,500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을 고효율가전제품으로 교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음
  - ◎ 서민층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에어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재원을 활용하는 사업이며,
  - ◎ 향후 201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여, 과세재원 여부를 고려하여 총553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중 해당 시·도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한 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금년에는 약 8,500여 개소를 지원할 계획임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어린이보육시설 등 약 42,400개소
- 사회복지시설의 수요가 많고, 에너지절감 효과가 큰 제품인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각 8,500여대를 무상 지원
  - \* 냉장고 등 지원제품은 조달청입찰을 통해 선정된 제조업체가 지원시설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품 설치·지원
-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해당 지자체(시·도)에 신청하고, 해당 지자체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
  - ◎ 에너지관리공단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복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 ◎ “평가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용중인 노후화된 가전제품의 사용시간, 이용인원, 노후화정도, 시급성 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 ◎ 아울러,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제품 설치후에는 만족도를 조사하여, 필요시 내년도 사업계획 및 평가에 반영 예정임
- 노후화된 저효율 가전제품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절약 분위기의 확산뿐 아니라, 서민층이 지속적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사업 첫 해인 올해부터 연간 약2,504 MWh의 전기를 절약할(1,064 CO<sub>2</sub>톤 감축)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이를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191백만원이라고 밝혔음

# 중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안전지킴이」에 맡긴다

문의 |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02-6922-0936)

- 노동부는 3월 22일(월)부터 12월 15일(수)까지 9개월간 안전관리 감독이 미치지 않는 중·소 건설 사업장에 「건설 안전지킴이」를 배치, 안전관리 순찰 및 감시 활동을 펼치게 할 예정이다.
  - ◎ 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 중·소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 관리에 소홀하다는 점을 인식, 시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최초로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 「건설안전지킴이」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시민단체 경력자 중 공모를 통해 총 50명을 모집하고
  - ◎ 전국 19개 건설 재해 취약지역에 2인 1조 25개 반을 배치하여 1개 반이 1일 3개소 이상의 건설 현장을 순찰하게 되며, ※ '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지방노동관서(47개소)당 1개조 이상 운영)
  - ◎ 순찰 결과, 안전 관리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개선 조치를 받게 된다.
  
- 순찰 대상은 추락·붕괴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 현장(건축공사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및 석면 해체 작업장이며
  - ◎ 추락·낙하 방지 조치(안전난간, 추락·낙하물 방지망, 작업발판) 여부, 석면 해체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근로자 개인보호구 착용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 ◎ 건설안전지킴이는 공사현장 외부에서 감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담장설치·지하작업 등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고 현장 내에 출입하게 된다.
  - ※ 현장 출입시 지방노동청장이 발급한 신분증 제시
  
- 순찰 결과, 가벼운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안전모, 보호의 등 개인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계도하되,
  - ◎ 급박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우선으로 신고하고
  - ◎ 신고를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이 패트롤 점검을 즉각 실시하고 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행·사법 조치를 하게 된다.
  
-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안전지킴이의 업무수행능력 및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의 활동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면서
  - ◎ 「건설안전지킴이 운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사업장별로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녹색·행복에너지 사랑나눔 공동캠페인」 협약 체결

- 저소득층 미납 전기요금 무상지원으로 에너지복지 실현 -

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기획부(02-6913-2131)

- 한국에너지재단(이사장 김기춘)은 3월 17일 오전 11시 한전 남서울본부 회의실에서 비씨카드(대표이사 장형덕), 김용구 국회의원,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와 「녹색·행복에너지 사랑 나눔 공동캠페인」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식에서 비씨카드는 한국에너지재단에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기금 1억 5천만원을 전달하였다.
- 「녹색·행복에너지 사랑 나눔 공동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카드 납부를 독려하고 비씨카드가 에너지빈곤층 지원 기금을 마련하여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전기요금 미납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공기업과 금융기관, 유관단체가 함께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이다. 이번 캠페인은 김용구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 비씨카드는 향후 전기요금을 비씨카드로 납부한 고객에게 영광, 고리, 월성, 울진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통한 녹색 에너지체험 등 다양한 공익성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에너지재단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시·군·구 및 사회복지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전기요금 미납 저소득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전기요금 미납 가구로까지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에너지재단은 2005년 7월 촛불화재로 인해 단전가구 여중생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2006년 9월 에너지기본법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